

제21회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강연 자료

노무현 정부의 통일·외교·안보

2007. 10. 23.

동북아시아위원회
위원장 이 수 훈

I. 참여정부 외교안보의 여건과 기본구도

1) 출범 시 여건

- 제2차 북핵위기를 안고 출범, 주가 급락, 외국인 투자의 유출, 경제 손실
 - 6자회담 마련, 9.19 공동성명 도출, 2.13합의 이행 단계 진입
 - 북 미사일 발사, 핵실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안보상황아래 국민 불안이나 경제 동요 최소화
 -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, 2006년 남북교역 13억 달러 돌파, 남북왕래 10만 명 시대 개막,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2만 명
- 한미동맹 관련 여러 미완의 과제 물려받아 압박요인 다대

2) 우리 외교안보 기본 구도

- 자위력 확충을 통한 자주국방, 국방개혁
 - 실용적 균형외교, 외교역량 강화
 - 한미동맹의 발전
 -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 추진, 2.13합의시 '동북아안보평화체제 메카니즘 W/G' 출범
- 참여정부 국정과제 1은 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”
 - 2007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통해 실마리는 마련한 셈

II. “노무현정부 들어 외교안보 망쳤다”는 비판,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

=> 반기문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임 (2006. 9)이나 한미FTA 협상 타결 (2007. 4), 그리고 美 의회가 한미동맹 결의안을 채택(2007. 5)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?

=>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성공적 개최는 어떻게 설명하나?

o 비판은 대략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발생한 것

- 대북정책과 한미동맹, 구체적으로는 대북 퍼주기론과 한미동맹와해론임

o 일방적 대북 퍼주기론에 대해

- 근거가 약한 정치공세 성격이 강함

- 엄격한 상호주의는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격차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운용했음 (미사일 발사이후 쌀 지원 중단, 핵실험이후 개성공단 추가 분양 중단, 금강산관광보조금 지원 중단)

- 붕괴나 흡수통일론이 있으나 비현실적이며, 점진적으로 대북평화변영정책을 펼쳐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하여 통합으로 나아가야 함 = 경제공동체, 사회문화공동체, 정치통합 수순

※ 지난 11년간 1인당 연평균 4.8달러 대북 지원, 서독은 통일 전 18년간 연평균 52달러 수준 지원

- 대안이 있나? 4당의 대북 정강정책 비교해보면 유사성이 차이점보다 많음

-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두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음. 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포용 발휘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의 핵심
 -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, 10월 북핵 실험 상황에서도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동요하지 않았음 (사재기 없었음, 주식시장 활성화, 외국인 투자 증가)

-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도약시킨 문건이며, 향후 10년 정도의 남북관계 관리 및 진전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

- 한미동맹 와해론과 강화론에 대해
 - 한미동맹은 제도이기 때문에 변화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변화할 수밖에 없음. 그리고 조정 시에는 양국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 조정이 일어나고 있음.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켜내야 할 문제
 - 한미동맹은 2005년 부시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 합의에 따라 대단히 역동적이고 호혜적 포괄적 관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음
 - ※ 이라크 파병, 카트리나 재해시 구호지원, 미 대사관 부지 문제 해결,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 기지 대체, 방위비 분담, 전략적 유연성 존중, 전시작전통제권 전환,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, 한미 FTA 협상 타결
 - 현재,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나, 특히 2.13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 공조는 매우 긴밀함
 - 강화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